

【특 집】

한국사 학계의 만주·만주국에 관한 집단기억

—만주 표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 주 백**

Ⅰ 차 례 Ⅰ

I. 머리말

II. 鄉愁를 자극하고 왜소해진 만주기억(1945년~1960년대 초중반)

III. 민족서사의 핵심 기억으로 복원된 만주기억(1960년대 중반경~1970년대 초)

IV. 남북한 체제우월경쟁과 적대적 배제의 기억으로서 만주기억(1970, 80년대)

V. 다양성·혼종성의 유입과 균열 조짐이 보이는 만주기억(1990년대~)

1. ‘만주국’의 등장과 획일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만주기억(1990년대)

2. ‘동아시아’와의 연관 속에서 ‘융합’ 공간으로서 만주기억(21세기)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해방 직후부터 21세기 들어서까지 한국사 학계가 품고 있는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의 형성 변화를 추적하였다.

한국인에게 만주는 민족사라는 서사구조에 의거하여 기억되고 있는 감성적 공간이다. 1945년 해방과 분단은 다양한 만주체험을 개인 차원의 鄉愁 수준에 머무르게 하였다. 한일회담과 남북한 사이의 치열한 체제경쟁 속에서 민족의 受難과 저항의 공간으로 만주를 기억되게 하였다. 국가는 반일민족주의와 반공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작동하며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을 복원하고 재구축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

* 이 논문은 '만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동아시아 각국에서 바라본 만주·만주국'(2018.11.30-12.2, 동아대)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sinjb81@naver.com / sinjb81@hanmail.net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획일적이고 단일화한 만주지역에 균열이 나타났다. 새로운 시선은 融合의 공간으로서 만주의 혼종성에 주목해 왔다.

그럼에도 만주지역에는 반공민족주의와 반일민족주의의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민족서사에서 만주지역은 선택적으로 소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만주국이란 傀儡性和 한반도의 분단체제 때문이다.

주제어: 집단기억, 만주, 역사교과서, 동아시아, 융합

I. 머리말

사람의 기억은 개별적인 사실이 퇴적하여 보존한 결과라기보다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변화해 간다. 그래서 모든 기억은 유기체이며 현재의 시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 과거의 존재를 불러 미래를 말하려고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억, 특히 국민국가 만들기에서 기억은 학교와 사회 교육에 따라 재창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창조되는 기억은 개인 기억의 총합이 아니다. 특히 국가의 기억이 그렇다. 국가의 기억은 ‘집단기억(Collected)’을 상징한다. 집단기억은 개인 기억들의 교집합 부분을 의미하는 ‘집합기억(Collective)’과 확연히 다른 기억이다. 집단기억은 집합기억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개인의 기억과도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실과도 다를 수 있으며, 그 기억 자체가 하나의 신념 체계로서 독립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서 집단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기억이다.

필자는 한국사 학계가 ‘만주’, ‘만주국’을 어떻게 기억해 왔는지를 집단기억이란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이 글을 썼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 필자에게 주어진 ‘한국사 학계’를 대상으로 분석하려다 보니 우선 집단기억과 연구사 정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집단기억으로서 만주는 누가 특정한 사실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고, 언제 어떻게 만주의 역사를 분

석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연구동향을 고려는 해야겠지만, 만주의 어떤 이미지를 왜 그 시점에 소환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소환이 가능했는지, 그것을 통해 집단기억의 주체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봉오동·청산리 전투에 대한 온갖 사실들을 해명하는 접근도 중요하지만, 두 전투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한국사 학계’의 움직임만으로 해명하지 않고 그것을 정치사회 동향과 맞물려 살펴보는 접근을 들 수 있겠다. 흔히 이럴 때 작동하는 방식이 선택과 배제, 그리고 浮彫의 수법이었다.

이 글이 분석하려는 곳을 한국에서는 滿洲와 滿州의 한자를 구별하지 않고 ‘만주’라 불러왔다.¹⁾ 그것도 종족집단의 명칭이 아니라 지역명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만주는 일제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으로 그 이름이 계승되었다 간주하며 기피해야 할 감정이 담긴 말이다. 그들은 그곳을 수도 베이징의 동북쪽에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동북지방’이라 부른다. 존재의 위치에 따라 같은 공간을 전혀 달리 호명함으로써 기억해야 할, 또는 기억하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만주를 기억해 왔으므로 만주를 하나의 이미지로만 기억해 오지 않았다. 한때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는 만주기억만이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만주는 식민경험과 연관을 지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북한과의 체제우월경쟁과 맞물려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억공간이기도 하였다. 냉전의 압박이 약해진 199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만주국이란 역사적 존재를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만주는 하나의 획일화된 공간으로 기억할 수 없는 곳임을 증명한 문제의식들이 분출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한국사 학계의 만주에 관한 기억은 流動해 왔다는 측면에서 특정한 시기의 남북관

1) 어쩌면 한국사회는 두 한자가 각각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왜 지금은 滿州로 쓰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조차 품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더 적확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에도시기에도 두 한자를 혼동했는데, 1945년 이후 滿州로 쓰고 있다. 滿은 滿洲를 滿州로 쓴 적이 없다. 나카미 다사오, 『역사 속의 ‘만주’상』, 나카미 다사오(中見立夫) 외 지음, 박선영 옮김, 2013, 『만주란 무엇인가』, 소명출판, 32쪽.

계를 포함한 국제관계, 국내 정치사회의 동향, 그리고 연구경향이 미친 영향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은 분석의 대상을 한국사 학계의 만주기억에 두면서도 거기에만 한정하는 폐쇄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문학작품을 끌어오고, 국문학사의 연구도 활용했으며, 중국사와 일본사의 움직임도 함께 참조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구체화하는 학문경향을 반영하여 분과학문에 대한 기계적인 경계, 더 정확히 말하면 ‘장벽’에 얽매어 ‘한국사’라는 범주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을 보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석대상이 국정제 또는 검정제로 발행된 역사교과서다. 연구성과를 선도하거나 연구방향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역사 연구의 결과가 즉각 반영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역대 정부가 연구경향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한 기억을 일방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다. 국정제는 물론이고 검정제에서조차도 정부의 지침, 곧 교육과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발행된 역사교과서 또한 없었다. 더구나 역사교과서는 한국사의 연구경향과 정치사회의 동향까지 반영하면서도 집단기억의 주체를 가장 잘 드러낸 기재였으므로 논지의 일관성과 중심성을 고찰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분석대상이다.

필자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크게 보면 세 시기로 나누어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을 분석하였다. 우선, 개개인의 향수와 잠복된 공간으로 급격히 변화한 1950년대까지의 만주기억을 제II장에서 살펴보았다. 제III장은 한일국교 정상화란 외적 충격이 이어지면서 民族의 淵源地인 만주를 민족서사의 핵심 공간으로 재창조한 1960년대의 만주기억을 분석하였다. 제IV장은 남북한 사이의 치열한 체제우월경쟁 속에서 적대적 배제의 원리를 강하게 작동시키며 재조정된 만주기억을 정리하였다. 이어 1990년대부터를 다룬 제V장은 압도적인 민족담론에 가려 보지 못했던 만주의 다양성과 혼종성에 주목하는 연구와 기억을 통해 균열해 온 만주기억의 양상을 정리하고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VI장의 맺음말에서 필자는 만주기억을 위해 한국

사 학계가 지양해야 할 인식과 태도를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II. 鄉愁를 자극하고 왜소해진 만주기억 (1945년~1960년대 초중반)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 거주자, 특히 해방공간에서 북위 38도선 이남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에게 만주는 매우 다양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만주에 대한 기억은 조선에 거주하며 8.15해방을 맞은 사람과 만주에서 돌아온 귀환자 사이의 격차, 곧 상상자로서의 외부자와 체험자로서의 내부자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귀환자라 하더라도 삶이 팍팍해 만주로 이주했다 돌아온 사람, ‘만주뽕’을 타고 ‘만주드림’을 꿈꾸며 이주했다 돌아온 사람, 만주를 고향으로 생각했다가 이남에 정착한 ‘낮선 이주자’ 사이에 만주를 기억하는 온도차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으로 만주를 기억했던 귀환 작가들 사이에서조차 만주를 소환하여 남한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이상을 실현한 공간으로 이곳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쓸쓸함을 곱씹는 공간으로 기억했을 수 있다.²⁾

비판, 동경, 고독의 공간으로서 만주에 대한 기억은 냉전이란 차갑고 무서운 현실과 마주해야만 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38도선 이남의 한국인에게 만주는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싸우는 제3차 국공내전의 현상이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滿洲’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1945년 8월 16일~1950년 사이에 모두 797건의 기사가 뜬다.³⁾ 거칠지만 경향성을 알 수 있는 이 통계 가운데 만주에 관한 동아

2) 해방공간에서 만주를 기억하는 다양한 사례는 문학작품들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김영주, 2019, 『해방 이후 시에 재현된 만주의 기억』, 『우리 文學연구』 61, ‘제III, IV장’을 참조하였다.

3) 검색은 2019년 10월 1일자로 다시 실시하였다. 당시 발간된 신문은 이것만이 아니었으므로 온전하게 만주를 언급한 통계가 아니므로 불완전한 분석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갈 수 없는 만주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였으므로, 필자는 당시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본다.

일보의 첫 보도는 ‘共軍長春서 撤兵 滿洲의 國共紛爭其後’라는 제목의 1945년 12월 1일자 기사였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1949년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였다.

공산화한 땅으로 바뀐 만주는 한국인이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으로 분단체제가 더욱 고착화했으니, 공산화한 만주는 이제 當代와 연계지어 상상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2년만 해도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151회 언급되던 ‘滿洲’가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해인 1953년에 이르면 80회, 1954년 33회로 확 줄어 들었다. 이로써 남한 거주 한국인의 시야에서 사라진 만주는 현재와 과거를 직접 연계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희망을 말하는 공간으로 호출하기엔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인간은 갈 수 없는 공간, 존재조차 희미해진 공간을 능동적으로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4·19혁명이 일어난 1960년에 이르면 30회 언급되었지만, 큰 홍수가 났다는 9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1945년 전후까지와 연관된 내용을 언급할 때 ‘만주’라는 단어가 튀어 나왔다. 과거에 존재한 곳으로서 만주가 호명되고 있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이때 느끼는 감성을 한마디로 압축하려면 개인들의 ‘향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시기 만주기억은 집단기억으로 적극 호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발행된 역사교과서의 서술이 이를 잘 보여준다.

8·15 이후 한국인이 처음 접한 역사교과서는 미군정청의 문교부에서 1946년에 발행한 『國史敎本』이다. 책에 만주라는 말은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다고 간략히 언급할 때만 유일하게 나온다. ‘해외망명’이라는 小項目에서조차 “미국 노령의 연해주 중국 상해 등지”에서 망명객이 항일운동을 벌였다고만 나온다. 이 부분은 李丙燾가 집필했는데, 그는 항일운동을 ‘국권회복운동’ - ‘3·1운동’ - ‘假政府樹立’ - ‘폭탄사건’ - ‘광주학생운동’ - ‘신간회운동’에 이어 李奉昌과 尹奉吉義擧를 설명하는 순서로 네 쪽에 걸쳐 서술하였다.⁴⁾ 한국에서 오늘날까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이해하는 기본

4) 美軍政廳 文敎部, 1946, 『國史敎本』, 171 - 174쪽. 이후 언급할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신주

흐름, 곧 臨時政府 正統論은 이렇게 하여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만주는 소외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교과서를 출판한 申奭鎬는 이병도의 논리를 더욱 보강했다. 그는 ‘文敎部新敎授要目’에 의거하여 집필한 교과서에서 조선인의 만주이민을 간략히 언급하고 간도공산당이란 단어도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여러 단체와 더불어 나열했지만, 이병도처럼 만주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⁵⁾ 대신에 3·1운동의 여파로 일어난 독립운동을 “통일 지도하기 위하여” 임시정부가 세워졌다고 명확히 하였다. 또 1926년의 6·10만세운동과 1940년의 ‘광복군’을 새로 언급하여 抗日運動의 系統的 흐름을 보강하였다.⁶⁾ 이병도 역시 1949년에 처음 출판한 자신의 교과서에서 신석호처럼 6·10만세운동과 한국광복군에 대해 언급하였다.⁷⁾ 두 사람은 만주에서의 역사를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이 만주를 잊어도 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마찬가지 흐름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제1차 교육과정(1955~1963)과 1965년 이전의 제2차 교육과정(1963~1973·1974) 때 발행된 대다수의 역사교과서에서 만주는 언급되지 않았다.⁸⁾ 국가가 일관되게 만주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단지, 만주라는 말은 일본이 이곳을 침략한 이후 조선에서 군수공업화가 추진되었고,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단어에 불과하였다.

만주를 사실상 잊힌 공간으로 당연시하던 학교교육의 흐름은 예외적인 사회현상이 아니었다.⁹⁾ 이선근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집필하여 출판한 『政訓教程 13 韓國獨立運動史』에서 만주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언급하고 이 책의

백, 「만주와 해방후의 기억」(『만주연구』 2, 2005)을 저본으로 하였다.

5) 申奭鎬, 1948, 『中等國史』, 東邦文化社, 213쪽, 215쪽.

6) 申奭鎬, 1948, 위의 책, 214쪽, 215쪽, 218쪽.

7) 李丙燾, 1955, 『우리나라의 생활(역사)』, 白映社.

8)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개정 교과서부터는 조금 달리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분석하겠다.

9) 항일공간으로서 만주는 1920년대 독립운동에서 약간 언급한 최남선의 책이나, 무장활동단을 집중 정리한 채근식의 글에서 다루는 매우 예외적인 공간이었다. 崔南善, 1946, 『朝鮮獨立運動史』, 東明社; 蔡根植, 1950,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 公報處.

본문을 끝맺었다.

이 밖에도 ‘만주’ 광야를 무대로 하여, 勇戰敢鬪한 ‘白冶 金佐鎭’ 장군의 ‘靑山里 싸움’과 ‘李青天(現池大亭)’ 장군의 戰功이며, 다시 ‘洪範圖’ ‘吳東振’ 諸位의 武力抗爭 等,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사건이 얼마든지 계속되었다.¹⁰⁾

모두 369쪽이나 되는 분량에서 단 세 줄 언급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만주의 역사를 사실상 서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그나마 언급한 내용 역시 1920년대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활동, 달리 말하면 민족주의운동의 저항공간으로서 만주를 호명하였다.

그런데 이선근의 짧은 언급에서도 공산화한 만주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활동만이 아니라 1930년대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무장활동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그나마 미약하게라도 이어져 오던 만주기억 가운데 반공민족주의가 무엇을 배제하고 어떤 방향에서 왜소화하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선근은 이 책의 오타자 정도만 수정하여 1956년에 일반 도서로 간행하였으니,¹¹⁾ 그의 관점은 1950년대 후반에도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¹²⁾

그런데 이승만정부 시기 반일민족주의는 반공민족주의에 비해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승만정부는 ‘평화선’을 넘어온 일본 어선들의 나포,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달리 강경하게 대응한 한일 예비회담들, 재일교포의 복송을 반대한 움직임 등에서 시사해 주듯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리하여 권위적인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 반일담론을 동원하였다.¹³⁾ 달리 말하면 이승만정부의 반일민족주의는 국민의

10) 李瑄根, 1953, 『政訓教程 13 韓國獨立運動史』, 國防部, 367쪽.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6월 30일에 발행된 책이다.

11) 李瑄根, 1956, 『韓國獨立運動史』, 尙文院. 5월 15일에 발행된 책이다.

12) 이선근은 앞서 인용한 문장에 바로 이어진 ‘결론’ 부분의 맨 끝에서 “滅共勝利에서 한국의 통일독립이 완성되는 날,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완성의 이 한국독립운동사가 완성되는 날, 20세기 후반기의 새로운 세계사도 비로소 창조될 수 있을 것임을 감히 필자는 예고하여 둔다”라며 글을 끝냈다(李瑄根, 1953, 앞의 책, 369쪽.). 그도 분단으로 한국독립운동사가 완성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민족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이승만정부 당시 반일민족주의가 없었다거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국가가 만주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반공민족주의 역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와중에도 역사서술에서 배제하는 방식, 달리 말하면 기억하지 못하게 망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한국전쟁 와중에 집필되어 정전협정 직전에 ‘한국군의 정치교육 교재’로 간행된 이선근의 책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다. 더구나 그가 이 교재를 사회에서 그대로 출판했을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현실은, 학교교육에서의 만주기억이자 군대의 만주기억이 곧 정부의 만주기억이면서 사회적 기억으로도 유통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반공 및 반일 민족주의의 사회적 압력을 의식하여 여기에 저축되는 만주기억을 개인적으로 털어내는 사람도 있었다.¹⁴⁾

III. 민족서사의 핵심 공간기억으로 복원된 만주기억 (1960년대 중반경~1970년대 초)

1960년대 들어 한국인의 만주기억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일련의 갈등과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제3공화국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세력이 세운 정권이다. 박정희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정권안보를 보장받는 한편,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경제개발에 투입함으로써 취약한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려 하였다. 박정희정부는 ‘조국 근대화’란 집권 구호를 내세우며 국민의 민족 감정 내지는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동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한일회담이 굴욕적이라

13) 전재호, 2002, 「한국 민족주의와 반일(反日)」, 『정치비평』 9, 135쪽.

14) 안수길이 1945년 8월 이전에 발표한 글을 남한에 와서 개작하는 행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수영, 2005, 「만주, 혹은 ‘체험’과 ‘기억’의 균열 - 안수길의 만주배경 소설과 그 역사적 단층」, 『현대문학의 연구』 25, ‘제II장’ 참조.

고 비판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위가 연달아 이어졌던 데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일본과의 관계 구축에 더 역점을 둔 박정희 정부의 접근은 일제의 지배를 당했던 국민의 민족 감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강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을 억누르며 한일간 외교관계를 복원한 박정희정부는, 정치와 경제 방면에서의 태도와 달리 문화와 일상 그리고 정신의 영역 등에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가령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외래 풍조를 막는다며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음반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여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과 유통을 금지하였다.¹⁵⁾ 또한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낸 영웅 등을 새삼 부각하여 국난 극복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1964년 5·16에 즈음하여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영웅들의 초상화를 진열한다든지, 1966년부터 현충사를 증건하고 1968년에 이순신 동상을 광화문 네거리에 설치한 선양사업이 대표적인 보기일 것이다.¹⁶⁾ 더구나 1960년대 중반 들어 북한이 무장공비를 빈번하게 납파하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는 등 남북한 사이에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 갔다.

이에 장기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정부는 국민을 통합하고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여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國民教育憲章을 1968년에 선포하고 반공민족주의를 전면화하였다.¹⁷⁾ 1968년 예비군을 창설하고 1969년부터 대학교에서 군사 교련을 실시하였다. 사회동원을 일상화,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정부의 반일민족주의와 반공민족주의는 국난 극복이란 이름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미 1963년부터 적용한 제2차 교육과정은

15) 권보드레 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542 - 546쪽.

16) 홍석률, 2002, 「1960년대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62, 192 - 193쪽.

17) 국민교육헌장에 관해서는 신주백, 2005, 「국민교육헌장의 역사(1968~199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2005,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과 국사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편(1968~1994)」, 『역사문제연구』 15 참조. 『역사문제연구』 제15호에는 국민교육헌장에 관한 ‘특집’으로 다섯 편의 논문(김석수, 김한중, 윤해동, 황병주, 신주백)이 수록되어 있다.

민족의 국난 극복을 강조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애향 애족정신을 함양”하고,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려는 신념을 기르자고 강조하였다.¹⁸⁾ 하지만 이 교육과정은 격화하고 있던 남북한 체제경쟁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이에 박정희정부는 제2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969년부터 새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역사교육의 경우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일을 지켜왔던 조상의 업적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굳건한 민족의식과 애향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적 과업인 반공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기른다”며 국난 극복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強力한 反共統一教育을 지향하였다. 특히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며 “애호 관리하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역사교육을 추구하였다.¹⁹⁾

민족과 반공을 더욱 강조한 역사교육은 한국사 학계에서도 호응하였다. 당시 고려시대를 전공하고 있던 성균관대학교의 이우성은 다음과 같이 한국사 학계의 위기감과 대응방향을 전하였다.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유세계 대 공산세계의 양극화라는 상황 속에 이 땅의 사람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자인하여 이른바 ‘자유’의 수호를 유일의 구호로 삼았고 **민족 그것은 망각되거나 등한시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 세계의 사정은 차차 강대국들의 실리주의적 입장을 노골화시켜 양극화의 상황은 다원화의 경향을 보이게 했고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의 종교 내지 통속적 문물이 일본의 자본 및 상품과 표리관계를 이루어 이 땅에 도도히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자유’의 수호만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던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민족 또는 민족문화의 수호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유 세계의 일원이라는 관념만으로는 오늘의 국제사회 속에 생존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살길을 찾아야겠다는 절박한 현실을 직감하게 되었다.**(강조-인용자)²⁰⁾

18) 1966.10, 「紙上座談 改正된 教育課程과 歷史教育의 諸問題」, 『歷史教育』 9, 165쪽. 李廷仁의 발언이다. 2차 교육과정을 제정했을 때,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倭亂을 日亂으로, 壬辰倭亂을 壬辰日亂으로 사용하도록 한동안 지도하기도 했다.

19) 「문교부령 제251호(1969.9.4 개정 공포) 중학교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교육부, 281쪽.

이에 따라 한국사 학계에 불어 닥친 바람이 한국사와 한국사회에 내재한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한편, 조선후기에서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찾아내려는 움직임이었다.²¹⁾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민족 수난사와 지배에 저항한 민족운동사의 측면에서 민족사를 복원하려는 움직임 또한 개인 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우연이 아니었다. 가령 安壽吉의 소설 『북간도』(196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절적 현상에서 이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59년에 발표된 소설의 제1부는 19세 후반기부터 다루었는데, 살만한 ‘새로운 定住地’ 만주에 이주한 농민을 민족 주체로 하였다. 이때의 농민은 농토를 상실한 유이민이 아니라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주자였고, 만주는 정착과 희망의 공간이었다. 1961년과 1963년에 발표한 제2, 3부는 차별받는 조선인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독립운동 세력을 민족 주체로 내세웠다. 1967년에 발표한 제4, 5부는 청산리전투를 비롯해 1920년대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움직임을 민족 주체로 전면화하였다.²²⁾ 안수길의 소설에서 민족 주체를 둘러싼 제1부와 제4, 5부의 격차는, 변해가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분위기, 달리 말하면 만주국이 위성국가라는 문제의식이 박약한 저자의 체험에 의해 내장된 만주기억과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적 압박이 강해짐에 따라 재구성한 만주기억의 격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²³⁾

민족사를 복원하는 방향은 민족수난사를 부각시키고 민족운동을 확장적으로 설명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사가 주도한 한 권의 학술기획은 그 방향을 가장 압축적이고 중

20) 李佑成, 1971, 「1969~70年度 韓國 史學界의 回顧와 展望, 國史 - 總說」, 『歷史學報』 44, 1 - 2쪽.

21) 물론 박정희정부의 근대화=산업화 논리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호응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여기에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는 양자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신주백, 2014, 「관점과 태도로서 '內在的 發展'의 形成과 1960년대 동북아시아의 知的 네트워킹」, 『韓國史研究』 164; 2017, 「1960년대 '근대화론'의 學界 유입과 한국사연구 - '근대화'를 주제로 내세운 학술기획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125 참조.

22) 이선미, 2005, 「'만주체험'과 '만주서사'의 상관성 연구 - 안수길의 '북간도'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5 참조. 소설 『북간도』는 1959년 4월 제1부, 1961년 1월 제2부, 1963년 1월 제3부, 그리고 1967년 7월 새로 작성한 제4,5부를 합쳐 三中堂에서 상하권으로 발행되었다.

23) 한수영, 2005. 앞의 논문, 19쪽.

합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이다.²⁴⁾ 만주지역 민족운동사와 이민사에 관한 학술논문이 이즈음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움직임도 마찬가지이다.²⁵⁾

민족운동사에 대한 확장적 해석은 체제화를 동반하였다.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역사적 논거를 제시하며 차분하게 정리한 글도 1968년에 나왔다.²⁶⁾ 또 만주지역의 독립군에 관한 체계적인 서술에 그치지 않고 그 독립군이 한말 및 한국군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기획도 1969년에 시도되었다. 후자의 기획과 관련한 편집진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집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⁷⁾

만주독립군은 일제의 강점 기간 만주에서 항전하던 민족의 군대이다. 이의 연원은 구한국군, 의병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이의 계승은 광복군과 건국 후의 국군으로 이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만주독립군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주안점이다. 紙面관계로 청산리전역과 봉오동전투만을 취급한 것이 유감이다. 신흥무관학교는 그 족적을 더듬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마멸된 지금 사료적인 면에서도 평가될 것으로 믿는다.(강조-인용자)²⁸⁾

여기에서 신동아 편집진이 사회주의운동 세력을 배제한 관점에서 만주지역 독립군의 역사적 위치, 더 확장적으로 말하면 만주지역 민족사가 한국근현대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특집을 기획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960년대 후반경에 와서야 비로소 만주지역이 임시정부 정통론과

24) 1969,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25) 尹炳奭, 1969, 「參議·正義·新民府의 成立過程」, 『白山學報』 7; 尹炳奭, 1969, 「1928. 9년에 정 의·신민·참의부의 통합운동」, 『史學研究』 21; 高承濟, 1968, 「間島移民史의 社會經濟의 分析」, 『白山學報』 5.

26) 洪淳鉉, 1968.3, 「上海臨時政府의 正統化過程 - 漢城政府와의 一體化作業을 中心으로」, 『新東亞』.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서 한국정치사를 전공하고 있던 저자는, 결론에서 “미완의 고찰이지만 상해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노령의 국민의회를 흡수하고 또한 자신을 개조하여 한성정부와 일체화한 것으로 국내외에 정치적 통일을 糊塗한 것은 그나마 大業에 속하는 일이었다”고 언급하였다.

27) ‘특집 3·1운동 50주년을 시리즈 光復의 證言 ④ - 滿州獨立軍의 活動’: 尹秉奭, 「滿州獨立軍의 編成」; 李種奭, 「日軍大隊를 殲滅한 鳳梧洞의 決戰」, 李範奭, 「屍山血河의 靑山里戰役」; 元義常, 「新興武官學校」.

28) 1969.6, 「編輯後記」, 『新東亞』, 480쪽.

연계되어 당위적으로만 명시되는데 그치지 않고 민족사에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달리 말하면 이즈음에 이르러 만주지역이 저항의 상징공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말해 줄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볼 수 있겠다.

새로운 역사기획과 만주기억은 국사편찬위원회가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발행한 『韓國獨立運動史』 1~5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책은 한국정부에서 기획 제작한 독립운동사에 관한 첫 번째 개설서이자 자료집이다. 책에는 의병전쟁부터 한국광복군의 활동까지 기술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번역되어 있다. 三府 뿐만 아니라 이선근의 교재 등에서 배제되었던 朝鮮革命軍을 비롯해 1930년대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활동까지를 포함한 만주지역 독립운동사도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박정희정부가 나서서 민족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만주기억을 역사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새로 발행된 역사교과서에는 만주지역의 독립군 활동과 투쟁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극 서술되었다. 예를 들어 이전부터 광복군을 언급한 신석호는 1957년에 출판한 중학교용 『國史』 교과서에서 만주지역의 무장투쟁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8년과 1973년에 출판한 역사교과서에서 3·1운동 직후 무장단체의 활동과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를 한 문단으로 언급하였다.²⁹⁾ 다른 교과서에서도 청산리 전투의 전과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³⁰⁾ 심지어 1930년대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반만항일무장투쟁까지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있었다.³¹⁾

신석호가 집필한 1968년판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를 보면, ‘VII. 조선의 근대화 운동’ 가운데 ‘4. 일본의 진출과 민족의 수난’이란 단원은 6개의 小項目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3. 일본의 독도 강탈과 간도 양여’라는 부분이 있다. 그의 교과서는 ‘독도’를 小項目의 제목으로 뽑아 한 쪽 분량

29) 신석호, 1968, 『인문계 고등학교』, 광명출판사, 236쪽. 1973년 판본도 같았다.

30) 예외적인 경우가 이흥직의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동아출판사, 1968)이다.

31) 이원순, 1973,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233 - 234쪽.

가까이 할애하였고, 간도의 역사와 영토문제를 1/2쪽 이상 언급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특히 서술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는 해석문제와 더불어 간도가 일본의 대륙권익정책과 맞교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도문제를 “장래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³²⁾ 반일민족주의가 관통되는 가운데 만주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독도와 간도에 대한 영토의식도 함께 복원한 것이다.

신석호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밑에서 가난해진 농민들이 간도와 중국, 시베리아, 일본, 미국, 러시아 등지로 떠났다고 하면서 ‘2. 국내외의 독립 운동’에서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편 만주에서는 3·1운동 직후 서로 군정서(西路軍政署)·북로군정서 등 수많은 무장 독립단이 조직되어 압록강·두만강 연안의 일본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국내 침투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1921년 김좌진(金佐鎭; 1889~1930)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에서 크게 일본군을 무찔렀다. 그러나, 1931년에 만주 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나 일제가 만주를 지배한 후 만주에서의 독립 운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³³⁾ (강조-인용자)

비록 청산리전투가 벌어진 해를 1921년으로 잘못 언급하고 1931년 이후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 없었던 것처럼 묘사한 점은 사실에 맞지 않지만,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해 이 정도의 분량으로, 더구나 1920년대 전반을 언급한 교과서도 당시로써는 흔하지 않았다.³⁴⁾ 실제 간도 영토문제와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해 모두 언급한 교과서 필자는 신석호

32) 신석호, 1968, 위의 책, 225쪽.

33) 신석호, 1968, 같은 책, 236쪽.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韓國獨立運動史』 제5권(1969)이 발행되기 이전에 간행된 교과서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4)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청산리전투 등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자세히 언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교부, 1968,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윤세철 신형식, 1968, 『인문계 고등학교 새로운 국사』, 정음사; 변태섭, 1971,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법문사; 이원순, 1973,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모두 1968년 1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로서 신석호의 언급보다 많은 분량을 만주지역 독립운동사 서술에 할애하였다.

중학교의 교과서 가운데는 청산리전투가 있었다고 간단히 언급한 金聲近 외 2인, 1966, 『중학교 사회』 II, 教育出版社가 있다.

이외에 변태섭 뿐이었다. 반대로 두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역사교과서도 있었으며,³⁵⁾ 둘 중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신석호 교과서의 서술에서 시선을 끄는 내용의 하나는 일본이 만주를 지배했다고 서술하지 '만주국'이란 존재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五族協和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국의 등장은 다민족 국가로서 조선인을 포함해 구성원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만주에서 창출되고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만주국은 일본의 위성국가였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체제가 광역화했다는 의미도 있다.³⁶⁾ 1960년대 만주의 민족사가 복원되는 과정은 혼종성의 맥락과 만주국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만주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위에서 인용한 신석호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주목을 끄는 또 다른 하나는 만주사변 이후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끝났다고 서술한 점이다. 물론 당시까지 연구의 한계가 있어 1931년 이후 反滿抗日武裝鬪爭을 언급하기 곤란한 점도 있었겠지만, 앞서 제시한 『韓國獨立運動史』 제5권은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1930년대 무장활동도 조금은 언급하고 있는데 이조차 서술하지 않았다는데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주의운동 계열 중심으로 전개된 1930년대 무장투쟁사를 역사에서 배제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활동을 민족사에서 배제한 태도는 1920년대 민족운동사에 관한 서술에서도 일관된다. 민족사로 복원하는 출발지점에서부터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의 형성에 반공민족주의가 작동한 결과이다.

반일·반공 민족주의에 입각해 만주지역에서의 민족수난사를 복원한 접근은 이미 그때 당시부터 개인의 기억에까지 억압과 배제가 작동하였다. 이는 안수길의 『북간도』 제4, 5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은 만주사변 이전까

35) 한우근, 1968,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을유문화사; 이흥직, 1971,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동아출판사.

36) 신행기, 2005, 「민족이야기의 두 양상 - 안수길의 '북간도'와 이기영의 '두만강' 분석」, 『한국학논집』 32, 58쪽.

지로 한정되어 있고, 1920년대 부분에서도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움직임은 언급하지 않는다. 안수길이 1931년 만주로 이주하여 1945년 6월까지 거주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서술 태도이다.

그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만주에 대한 기억을 소설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1930년대 만주지역 민족운동의 현실, 달리 말하면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왜소했던 민족주의운동 계열과 대비되게 지속적이면서도 왕성했던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무장투쟁사라는 비대칭적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 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만주사변 이후까지로 소설을 연장했을 때 그 자신의 체험적 기억을 표상화하는데 따른 이념적 부담이란 압박감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처럼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정부차원이든 개인차원이든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반일·반공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수난사와 민족운동사의 상징공간으로서 만주기억이 집단기억으로 복원되고 정착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반일과 반공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외부의 적을 단순 대상화하고, 동시에 다양한 기억이란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획일화한 만주기억의 원형이 이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IV. 남북한 체제우월경쟁과 적대적 배제의 기억으로서 만주기억(1970, 80년대)

민족을 주체로 한 집단기억의 역사, 곧 민족서사의 핵심 역으로 만주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은 1970년대 들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아 변신한다. 1960년대의 흐름에 영향을 준 근본적 전환점이 외부의 충격이었다면, 1970년대 만주기억의 변신에 영향을 준 결정적 충격은 북한의 역사인식, 곧 주체사관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는 1980년대 이후에도 한국사 연구와 역사교육에 규정적 영향력으로 지속하여 왔다. 분단체제의 현상변경은 차치하고 약간의 이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그 과정을 짚어

보자.

1969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에서 책임진다’는 독트린을 발표하며 베트남전쟁에서 밀려났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철수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편의 하나로 남북대화를 박정희정부에 요구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과 7·4남북공동성명은 그 결과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세계정세가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옮겨가는 결정적 전환점에 섰던 시대적 전환에 등 떠밀린 남북한 정권도 합류하는 듯하였다. 1971년에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예비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외중에 남과 북은 자신의 눈으로 상대방의 실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남과 북은 1972년 적십자회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갈등하였다. 대화를 사실상 파탄 낸 직후 남북한 정권은 각각 유신헌법과 사회주의헌법을 시행하였다.

분단 이후 처음 상대방의 실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남북한 정권의 적대적 경쟁의식은 체제를 다시 정비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유신정권은 ‘주체적 민족사관’을 전면에 내세웠다.³⁷⁾ 서양철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으로 국민교육헌장을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관여한 청와대의 박종홍 특별보좌관은, 박정희정부의 이데올로그답게 국적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주체적 민족사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민족사관은 과거에 대한 인식의 태도임을 넘어서 결단과 행동에 힘이 되는 민족의 저력을 재발견함이고, 미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슬기와 용기를 다하여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새로 만듦으로써 과거의 현재를 뜻있게 빛내는 창조적 기반인 것이다.³⁸⁾

37) 이와 관련한 한국사 학계의 움직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각주가 없더라도 신주백, 2014, 「관점과 태도로서 '內在的 發展'의 분화와 民衆의 民族主義 歷史學의 등장 - 民衆의 再認識과 分斷의 發見을 중심으로」, 『東方學誌』 165 참조.

38) 朴鍾鴻, 1973.11, 「主體的 民族史觀」, 『國民會議報』 3, 41쪽.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발행한 잡지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것은 “계급을 초월한 채 깊이 그의 뿌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 내리고 있는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³⁹⁾ 유신정권은 민족사관을 세우기 위해 주체성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주체적 민족사관’이란 역사관은 한국사 학계가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역사인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그것을 규정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가령 고려대의 강진철은 주체적 민족사관이란 개념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만 “민족의 자주적 자율적 능동적인 존립성’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또 서울대의 한영우는 “민족주의를 역사인식의 전제로 해서 형성된 사관”이라고 정의했으며, 중앙대의 김용덕은 “식민지 사관의 대립개념”이라 말하였다.⁴⁰⁾

주체적 민족사관이란 말이 등장할 때부터 제기된 의문의 하나가 북한의 주체사관과 어떻게 다른가였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주체는 “당, 나아가 김일성 개인을 주체로 하는 자주”인데 비해,⁴¹⁾ 유신정권은 계급이 아니라 민족 역사의 주체이며, 그 주체가 반만년의 긴 역사 속에서 민족적 주체성을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말한다. 민족사의 주인으로서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정권이 정통성 경쟁의 중요한 동원기재로 ‘역사’를 활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서로 자신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 남북한 정권, 곧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역사적 정당성의 뿌리를 식민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달리 말하면 일본의 지배하에서 어떤 항일투쟁을 벌인 움직임과 연계되어 있는가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측면에서 북한정권은 남한정권보다 덜 고민하였다.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당사자가 김일성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김일성과 그의 家系를 중심

39) 朴鍾鴻, 1973.11, 같은 글, 42쪽.

40) 姜晋哲, 1972.6, 「主體的 民族史觀과 歷史教育」, 『새교육』 24-6, 12 - 13쪽; 韓永愚, 1972.7, 「主體的 民族史觀과 歷史教育」, 『새교육』 24-7, 85쪽; 金龍德, 1972.7, 「主體的 民族史觀과 歷史教育」, 『새교육』 24-8, 41쪽.

41) 朴鍾鴻, 1973.11, 위의 글, 46쪽.

으로 한 항일투쟁사로 역사관을 크게 바꾸어 가고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유물사관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사관으로 바꾸는 역사인식의 전환은 조선노동당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정권은 바뀐 역사관에 따라 1970년대 들어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출판물을 쏟아냈다. 1979년부터 간행한 『조선전사』 1~33권이 상징적인 보기이다.

주체사관은 1926년 김일성이 지린성 지린에서 결성했다고 내세우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주체 1년’으로 간주하며 조선근대사의 종점이자 조선현대사의 출발로 본다. 1926년 이전의 항일투쟁에 관해서는 김일성의 아버지가 활동한 조선국민회를 내세워 민족주의운동에서 무산계급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활동이 벌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흥범도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비롯해 독립군의 활동에 관해 아주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친다.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단체로 규정하고 분파투쟁 등으로 쇠퇴하고 몰락했다고 규정한다.⁴²⁾ 북한정권은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만주기억에 독점과 배제의 원리를 강력하게 작동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작동원리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만주라는 공간을 김일성과 그의 항일투쟁으로 일색화한 북한정권의 역사인식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민족사의 핵심기억으로 복원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의 만주기억과 완전히 다르다. 남과 북의 정권이 전혀 다른 공간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다르다. 더구나 그러한 격차는 1970년대 들어 유신정권이 만주기억을 더욱 계통화하면서 크게 벌어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갔다. 이제 유신정권의 만주기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그러한 경향을 확인해 보자.

유신정권이 내세운 주체적 민족사관을 구체화한 보기는 제3차 교육과정의 국정제에 따라 제작된 중고교 역사교과서이다. 『중학교 국사』는 ‘1. 일제의 주권침략’ 부분에서 ‘(3) 일본의 독도 침탈’에 이어 ‘(4) 일본의 간도

42) 자세한 내용은 신주백, 2002, 「북한의 근현대사 연구에서 반침략투쟁사」, 『한국 근현대사 연구』 21 참조.

양여'라는 小項目 가운데 1/2쪽 분량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⁴³⁾ 여기에서 “을사조약 후 일본이 이 문제를 가로막아 자기들의 만주 침략을 위해 청에 넘겨주고 말았”는데, “이는 우리 의사가 아니며, 간도 지방에는 우리 동포가 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역사적으로 보아도 간도는 우리 영토임이 틀림없다”고 명시하였다.⁴⁴⁾

『중학교 국사』는 ‘6. 국내외에서의 독립 투쟁’ 단원에서 2와 1/2쪽 분량으로 ‘(3) 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4) 청산리 전투’, ‘(5) 대한 독립군단의 활약’, ‘(6)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활약’으로 나누어 만주지역 독립운동사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은 민족주의운동 계열로 계통화하는 논리가 체계적으로 다듬어졌다는 점이다. 교과서에는 “국내에서 일본군의 맹렬한 공격에 밀린 의병들은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찾아 만주로 이동”하여 이를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고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운동기지만 어떤 것일까. 『고등학교 국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독립 운동 기지란 서북 간도와 연해주에 한민족의 집단적 거주지역을 만들어 항일 독립 운동의 거점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 곳에서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모아 근대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시켜, 해외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 조직화, 무장화시켜 **독립 전쟁을 수행**하려는 것이다.⁴⁵⁾(강조-인용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공백이나 다름없던 1910년대 만주지역 민족운동사를 독립운동기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1910

43) 학교교육에서 간도와 독도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직전 부분, 달리 말하면 러일전쟁 직후 부분에서 서술하는 구성은 이때 정착되었다.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교과서는 이 부분에서 독도와 간도를 서술해 오고 있다. 반일 민족주의와 연관된 영토의식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주백, 2010,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독도연구』 13 참조.

44) 문교부, 1975, 『중학교 국사』, 216쪽.

45) 문교부, 1974,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206쪽.

년 망국 전후의 민족운동을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자리를 잡지 못했던 신흥무관학교도 독립운동기지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고 만주지역 민족운동사의 일부로 안착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계점, 즉 논리적 완결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임시정부 정통론 속에서 만주지역 민족운동사의 전략적 위치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어려움을 ‘독립운동기지’와 ‘독립전쟁’이란 시각을 활용하여 극복했음을 의미한다. 달리 보면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만주지역을 재구성하려는 國家의 記憶管理가 本格化했음을 뜻한다.

유신정권이 만주지역을 관리하고 재구성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이름으로 간행된 『독립운동사』 5, 6권(1973, 1975)과 국사편찬위원회(1971~), 秋憲樹(1971), 독립운동사자료집편찬위원회(1971~1976)에서 각각 기획 편찬한 資料集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사』 제5, 6권의 역할이 컸다. 제5권의 副題는 ‘독립군전투사(상)’이고 제6권의 副題는 ‘독립군전투사(하)’인데, 두 권은 獨立戰爭이란 이름으로 義兵鬪爭에서부터 韓國光復軍의 活動까지를 全部 體系化하였다. 이 책에서는 독립전쟁의 배경과 기반, 그리고 역사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독립 전쟁은 이미 을미 의병의 항일전부터 시작되어 을사 조약 체결과 1907년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인 항일전으로 전개되어 1908년·1909년에 이르러서는 전민족적인 무력전의 성격을 띠었다. …(점선-인용자)

그러나 일제의 우월한 병력과 야만적 초토 작전으로 의병의 항전은 1909년 말부터 약화되어 1910년 이후로는 국내에서의 집단적인 큰 활동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의병의 무장 항쟁은 온 겨레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하고 무장 독립 전쟁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었다. …

3·1운동은 독립 운동에 큰 전환기를 가져 오게 하였다. …

해외의 독립 전쟁은 그 지역적 조건에 따라 활동의 양상을 달리 하였다. 만주 연해주는 국내 진격을 위한 군사 기지로 성장하고 중국의 임시 정부는 **모든 독립 운동의 상징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미주와 화와이는 군사금 지원과 외교 활동의 중요 역할을 하였다.⁴⁶⁾ (강조-인용자)

4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 독립군전투사(상)』,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

독립전쟁론의 각도에서 『독립운동사 - 독립군전투사(상)』 제5권은 한국광복군과 사회주의운동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항일무장투쟁을 서술하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석호가 역사교과서에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민족운동이 끝났다고 기술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큰 인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독립운동사 - 독립군전투사(하)』 제6권은 ‘독립군 투쟁의 최후를 담당’한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만 다루었다.⁴⁷⁾ 독립군, 독립전쟁의 귀결점으로서 한국광복군을 부각하고, 이어 한국군으로 이어보려는 역사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관점과 태도를 매우 두툽한 출판물로 제기한 성과에 대해 이 글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어 한 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다. 독립운동기지 또는 독립전쟁론의 시각에서 만주지역 항일운동을 파악하려는 『독립운동사』 제5, 6권의 접근은 학계의 진지한 논의와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비록 제5권은 조동걸이 집필하였으니 연구자가 편찬위원회 사람들과 논의하여 얻어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학술토론과 지면을 통해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전쟁이란 용어 자체도 1970년대에는 익숙하게 쓰이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서야 조동걸 이외에 신용하, 박영석, 윤병석 등 독립운동사 연구의 제1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선학들이 독립전쟁을 독립운동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자 개념을 정의하기 시작하였다.⁴⁸⁾ 가령 신용하는 청산리전투를 ‘청산리독립전쟁’이라 규정하며 ‘독립전쟁’이란 개념을 학술논문에서 처음 도입하여 1984년에 발표하였다.⁴⁹⁾ 결국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에 관한 1970년대 논의는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해 정부기관에서 주도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독립전쟁에 관한 이때의 기본 정의를 1980년대 들어 부정할 학자는 없었다. 1980년대 중후반 들어 각자

위원회, 33 - 34쪽.

47) 예를 들어 ‘민족운동 총서 편찬위원회’의 네 번째 기획물인 신재홍의 『독립군의 전투』(사단법인 민족문화협회 ; 1980)도 있다.

48) 다만,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5권을 집필한 조동걸은 이후 무장투쟁에 관해 언급할 때 독립전쟁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았다.

49) 慎鏞廈, 1984, 「獨立軍의 靑山里獨立戰爭의 戰鬪들의 구성」, 『史學研究』 38.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럼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다시 『독립운동사 - 독립군전투사(상)』 제5권에 시선을 모아보자. 제5권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내용은 저항의 공간 만주를 독립전쟁의 일부인 ‘국내진격을 위한 군사 기지’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까지를 포괄하는 중심, 곧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임시정부를 내세웠다는 점이다.⁵⁰⁾ 이에 따라 제3차 교육과정 때 한 종류 뿐이었던 국정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임시정부가 민족운동을 “총지휘” 했다고 명확히 표현하였다.⁵¹⁾ 저항공간인 만주에서 민족운동이 의병전쟁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만주사변 이후에도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광복군에 흡수”되었다고 체계화하였다.⁵²⁾ 유신정권은 만주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있었다고 사실을 툭 던지듯 명시하며 나열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독립전쟁론에 입각하여 임시정부 정통론을 더욱 체계화하며 역사적 논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만주지역 민족운동을 그 일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런데 유신정권의 만주지역은 저항공간으로서 만주를 민족사의 공간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독립전쟁의 일부, 더 좁혀서 말하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무장투쟁 공간으로만 자리매김하는 협소화 과정을 밟아갔다. 이렇게 설명해야 한국광복군으로의 ‘흡수’를 말하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제5권에서 말하는 독립전쟁이란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전략론으로서 독립전쟁론’이 아니라 ‘무장투쟁이란 투쟁방법으로서 독립전쟁’이었다. 유신정권이 국정 『국사』 교과서에서 만주를 무장투쟁의 공간으로서만 잘못 표상화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달리 말하면 국가가 주도한 집단기억으로서 만주지역은 무장투쟁이 아닌 다른 민족운동을 만주지역에서 배제하거나 저평가하는 관점을 배태한 것이다.⁵³⁾

50) 중추적 역할이란 강조는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부정의 의미와 동시에 정통성 경쟁의 부정적 결과이다. 1980년대 중후반경부터 이러한 규정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필자도 임시정부가 민족운동의 정통이었다는 역사인식과 민족운동사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국정 역사교과서의 이러한 강조는 틀렸다.

51) 문교부, 1975, 『중학교 국사』, 230쪽.

52) 문교부, 1975, 『중학교 국사』, 235쪽.

더구나 임시정부 정통론을 더욱 체계화하는 과정은 사회주의운동 계열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유신정권 이전까지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운동 계열에 대한 망각을 강요하고 비판적 시선을 갖도록 했다면, 국정의 『국사』 교과서는 사회주의운동 계열이 분파적이고 민족분열적이어서 항일운동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직접 언급하였다.⁵⁴⁾ 사회주의운동 계열을 적대하는 유신정권의 인식은 반공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북한정권을 적대하는 태도 그 자체였다.

1979년 시점에 제3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교과서에서 언급한 적대적 서술은 당시의 남북관계를 반영한 결과였다. 1972년 남북대화가 실패로 끝나고 남북한 정권은 각각 유신헌법과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며 박정희와 김일성이란 1인권력을 더 절대화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다. 동시에 매우 치열하게 체제우월경쟁을 벌였다. 그것은 동시에 남북긴장으로 이어졌다. 가령 1974년 육영수여사가 피살되고,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으며, 1975년 베트남의 공산통일로 한국사회에 위기감이 높아졌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는 와중인 1976년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다. 이로써 닉슨독트린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데탕트도 끝났다.

이 시점에서 시도된 반민족적 존재로서의 사회주의운동 계열에 대한 집단기억화는 반공민족주의 논리를 활용하여 북한정권을 반통일 집단으로 규정하여 기억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하였다. 그러면서 반공통일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인식이었다. 정부가 주도한 이러한 시각은 1996년의 제6차 교육과정 때 발행된 국정의 『국사』 교과서에서까지 일관되었다.⁵⁵⁾ 덧붙이자면, 여기에 비판적인 한국사 학계의 움직임은 극히 소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분단문제에 창안하여 적대적인

53) 필자는 이것만이 아니었다고 추측한다. 만주지역 민족주의운동사에 관한 역사인식, 곧 봉오동전투보다는 청산리전투 - 三府 가운데 新民府 - 三府 해산 이후는 남만주의 國民府와 朝鮮革命黨보다는 북만주의 韓國獨立黨과 韓國獨立軍, 그리고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계통성을 강조하는 역사인식을 계보화하려는 태도도 나타났다고 본다.

54) 문교부, 1979, 『고등학교 국사』, 279 - 280쪽.

55) 문교부, 1982, 『고등학교 국사(하)』, 142쪽 ; 문교부, 1990, 『고등학교 국사(하)』, 158쪽 ; 문교부, 1996, 『고등학교 국사(하)』, 162쪽.

남북관계를 지속하려는 접근에 거리두기를 한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 분단 시대 역사인식을 강조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민족혁명당과 좌우합작운동에 관해 연구한 강만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⁵⁶⁾

이처럼 유신정권 들어 북한정권처럼 만주기억에 대한 배제와 적대가 더욱 강화된 이유의 하나는 북한과의 체제우월경쟁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밀어붙이는 일환으로 오로지 김일성의 만주 항일 무장투쟁만이 정통이라는 역사인식을 더욱 체계화하고 대외 선전을 강화하였다. 임시정부 정통론은 그 대칭점에 있었다. 만주기억은 그 대칭점을 보강해주는 기능을 하였다.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는 역사성을 증명하려는 정통론 경쟁은 동시에 상대방이 더 부족하고 나쁘다는 측면을 부각하는 방식과 병행되었다. 가령 ‘가짜김일성론’이 학문적 실증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되고 대중 사이에 더욱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시작한 시점이 1970년대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⁵⁷⁾ 그만큼 남북한의 치열한 정통성 경쟁의 와중에서 분단시대 역사인식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의 분열과 분절도 심화하여 갔다.

56) 姜萬吉, 1979, 『分斷時代의 歷史認識 : 姜萬吉 史論集』, 창작과 비평사; 강만길, 1990, 「朝鮮民族革命黨의 成立과 그 歷史性」,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강만길, 1991, 『조선민족 혁명당과 통일전선』, 和平社. 여기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그도 史論에서 언급한 이후 논문으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1970, 80년대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57) 이명영이 4인의 ‘김일성 가짜설’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 전반이었다. 2인의 ‘김일성 가짜설’을 주장한 허동찬도 1970년대 후반 여기에 가세하였다. 가짜 김일성론의 사회사는 한홍구, 2002, 「가짜 김일성과 한국현대사」, 『民族發展研究』 6,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참조.

V. 다양성·혼종성의 유입과 균열 조짐이 보이는 만주기억(1990년대~)58)

1. '만주국'의 등장과 획일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만주기억(1990년대)

국가가 만들고 관리해 온 민족서사의 일부로서 만주기억은 1990년대의 국정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세상은 크게 바뀌고 있었다.

1987년 6·10민주화운동에 따라 이제는 군인이 정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민주화의 열기는 북한과의 민간교류 확대로 이어졌다. '조국통일촉진운동'의 일환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이 1988년부터 본격 전개되었다. 그 틈새에서 북한의 연구성과들이 한국사를 중심으로 대거 소개되었다. 북한산 지식은 '반쪽'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공간 인식과 문제의식을 '한반도'로 넓히는데 결정적인 자극제였다.⁵⁹⁾ 사회주의운동에 관한 관심도 연구성과로 구체화하였다.⁶⁰⁾

한국사 연구를 크게 질곡 시키고 있던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국제정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중국이 천안문사건을 거치면서도 개혁개방에 연착륙해 갔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고, 이듬해 사회주의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무너졌다. 이념에 따라 편을 가르던 시대가 끝난 것이다.

이념의 장벽이 낮추어지는 와중인 1992년 한국은 중국, 베트남이란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제 중국은 미지의 땅이 아

58) 머리말에서도 언급했지만, '제V장'은 '한국사 학계'로 한정하며 분석하지 않았다. 이 시기 한국사 학계의 만주기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가겠다. 특히 만주기억에 균열을 가져온 중요한 주장은 '한국사 학계' 밖에서 바람이 일어났고, 한국사 학계는 그것을 이해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가령 '지역' '융합' '트랜스내셔널'과 같은 주제로 만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특정 분과로 한정할 수 없다. 앞서 '제III, IV장'에서 언급했듯이 만주기억에 관한 집단기억은 한국사 학계 밖에서 원형이 형성되었고, 한국사 학계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은 적도 없다. 더구나 기존의 기억을 뛰어 넘는 역사상을 제시한 적도 없다.

59) 신주백, 2018, 「19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 北韓産 역사지식의 유포와 한국사회-한국사 - 北僞에서 北韓으로, 半쪽에서 全體로 시선의 전환」, 『구보학보』 20-1.

60)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사회주의운동사 연구반, 1991,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나라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1945년 이전으로 복귀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이즈음 연변대학의 역사학자들로부터도 1945년 이전의 만주역사에 관한 중국측 성과가 많이 소개되었다.⁶¹⁾ 특히 1930년대 중국공산당에 소속된 조선인 대원의 활약과 관련한 내용들이 새롭고 신선하였다.

연변 등지의 새로운 연구가 소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이 김일성의 항일활동과 관련한 진짜가짜논쟁이었다.⁶²⁾ 논쟁은 사실에 관한 논란이면서 동시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만주지역사 또는 한국근현대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느냐와 연관된 사안이었다. 때문에 연구자마다 만주지역 민족운동사에 관한 다른 역사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갔다고 볼 수 있겠다.

시대의 역사적 전환과 더불어 이와 같은 논쟁을 거치면서 한국사 학계는 비로소 처음으로 민족주의운동 계열 중심의 만주지역 항일운동사상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⁶³⁾ 반공이란 이념의 망치를 집어던지고, 만주라는 공간에서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도 항일투쟁을 벌였으며 독립 이후에 민족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⁶⁴⁾ 또한 같은 민족주의운동 계열이면서 1930년대에 활동한 단체들도 역사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 만이 아니라

61) 자세한 내용은 신주백, 2005, 「연변에서의 역사연구와 자료 현황」,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선인문화사 참조.

62) 진짜가짜논쟁에서 진짜설의 입장을 실증적으로 해명한 이종석, 신주백의 논문이 있다. 신주백, 1994.6,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와 현실』 12, 역사비평사; 李鍾奭, 1997, 「김일성의 소위 '항일유격투쟁'의 虛와 實」, 『韓國史市民講座』 21; 신주백, 2000, 「김일성 가짜설」,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辛珠柏, 2000, 「青年金日成の行動と世界觀の變化(1929年末から1931年まで)」, 『思想』 912, 岩波書店.

63)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1920~45)』, 아세아문화사.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운동인데 배제해 왔던 그때까지의 서술을 거부하고, 민족운동이란 개념으로 민족주의운동 계열과 사회주의운동 계열을 병렬하며 동시에 분석한 첫 성과이다.

64) 필자가 부담은 있었지만 '박사학위논문(1996)'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었던 이유도 시대적인 상황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를 책(신주백, 1999, 위의 책)으로 발행하였을 때 사회주의운동 계열까지 서술했는 데도 불구하고 '1999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들보다 더 오래 만주에서 활동했던 남만주의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⁶⁵⁾

이념의 해체기에 만주기억이 저항의 측면에서만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확장되고 재조정된 결과는 검정교과서인 2004년판 『한국근·현대사』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그러한 서술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가령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의 하나로 새롭게 등장한 『한국근·현대사』는 ‘(㉔)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라는 단원의 네 번째 항목에서 ‘(㉔) 193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을 다루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도록 지목하였다.

- ① 일제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한 시기의 무장 독립 전쟁은 조선 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이해한다.
- ② 193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만주에서의 한·중 연합 작전은 일본군의 대토벌 작전과 한·중 양 군의 갈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독립군이 중국 본토로 이동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 ③ 193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는 조선 민족 혁명당이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고 중국군과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음을 파악한다.⁶⁶⁾

학교교육에서 조선혁명군을 서술해도 된다고 언급한 첫 교육과정이다. 한·중 연합작전이란 측면에서 다양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04년도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4종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모두 조선혁명군, 조선민족혁명당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당시 가장 많은 채택을 기록한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1쪽 분량으로 사회주의운동 계열까지를 포함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모든 과정을 기술하고, 더불어 1937년 6월의 보천보전투도 ‘역사의 현장’이란 박스를 만들어 특별히 언급하였다.⁶⁷⁾

사회주의운동 계열을 무장투쟁의 일부로 포함해 서술한 접근 자체가 당시로서는 매우 신선한 언급이었다. 더구나 김일성이 대한민국 정부의 민족

65) 張世胤, 1996, 「在滿 朝鮮革命黨의 成立과 주요구성원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66)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7] 사회과 교육 과정」. 참조한 자료 자체에 쪽 구분이 없다.

67) 김한중 외 5인, 1993,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96쪽.

운동사 교재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처음 사용된 사례일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국가가 관리하는 만주기억에 변형을 시도하는 접근을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만주기억의 반대편에서 이념공세를 통해 낱아지고 있는 과거 기억을 붙들며 선별적 기억으로 새로운 기억을 제지하려고 시도한 일도 있었다.⁶⁸⁾

그런데 이념갈등의 측면에서 만주기억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보다 더 큰 문제는 독립전쟁론을 세밀하게 재조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사회주의운동 계열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항일무장투쟁은 독립전쟁론과 대중적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방식, 운동 지도부와의 관계, 그리고 독립 이후 국가건설 전망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무리하여 독립전쟁이란 틀 속에서 이들 활동을 설명한다면 朝鮮革命論에 입각하여 무장투쟁을 벌였던 사회주의자의 활동에 억지스러운 해석이 개입할 수 있다.

만주기억이 다양화하고 있던 또 하나의 축진제는 가난하고 탄압받는 조선인 유이민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난 이주에 관한 연구가 늘어났다는 데 있다.⁶⁹⁾ 이민의 양상과 함께 조선인 이민을 촉진하고 기획한 지배자의 움직임도 포착하여 설명함으로써 지배자의 공간으로서 만주에 대한 시선이 이때에 와서 고정되기 시작하였다. 1960, 70년대 들어 만주 이주에 관한 관심은 가난과 억압, 영토관념의 측면이 컸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희망, 지배 등의 측면에서도 만주 이주를 다룸으로써 그곳에 삶의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조선인의 민족투쟁 공간만이 아닌 사람 자체를 주목하는 시선이 학문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과 만주기억에 확실한 전환을 보여준 성과가 한석정의

68) 2002.8.15., 「특종 - 김일성 항일활동도 부각」, 『주간조선』 1716. 이후 한국사회를 격랑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갈등은 이즈음부터 서서히 표출되었다.

69) 홍정필, 김기훈의 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편의상 여기에서 추가로 언급하면, 일본사의 맥락에서 접근한 임성모,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접근한 성과(『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역사비평사, 2008) 등은 확대된 시야, 다측면적인 접근을 통해 만주 이주사의 복합성을 해명해 내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와 달랐다.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이다.⁷⁰⁾ 이 책은 만주를 투쟁의 공간으로만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을 괴뢰국가로 간주하며 역사의 시선에서 배제해 왔던 기존의 태도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1세기 들어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만주국’을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만든 사실상의 출발점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은 만주국이란 ‘국가효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축진제였으며, 만주기억의 혼종성과 다층성, 그리고 1931년 전후와 1945년 전후의 단절적인 측면을 주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진척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민족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획일화되고 민족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주기억이 혼종적이고 다층적인 만주의 실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1990년대의 새로운 연구동향과 시대의 흐름은 민족사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만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을 말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동아시아’와의 연관 속에서 ‘융합’ 공간으로서 만주(21세기)

조선인이 살아가는 만주라는 공간을 해명할 때 만주국이란 실체를 대입하는 접근은 1945년 이전의 만주기억을 폭발적으로 다양화시키고 확장시켰다. 이주를 지배기관과 지배기관의 관계, 곧 제국 내부 질서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든지, 친일단체를 해명한다든지, 도시에서 조선인의 근대적 삶에 주의하거나, 이것과 농촌생활의 비교, 만주국에서의 조선인 교육을 분석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분과학문을 떠나 21세기 들어 다양화한 만주연구는 저항공간으로서 만주기억이 약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부각하였다.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의 움직임에 다층면에서 접근하도록 하였다. 한국에서 이러한 흐름을 담아낼 수 있었던 주체적 움직임의 원동력은 2001년 결성된 만주학회에서 찾아야

70)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이에 대해서는 김동노 박선영 윤휘탁 임성모의 서평이 있다.

한다.

만주학회는 2001년 ‘滿洲：東아시아 變動의 核’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만주’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위치 지워 보려고 ‘동아시아’라는 개념과 관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변동의 핵’이란 문제의식은 ‘동아시아 변동의 진원지’ 또는 ‘동아시아 모순의 교차지’, ‘동아시아 변화의 시발점’으로 구체화하면서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2005)라는 기획으로 이어졌다.⁷¹⁾ 일련의 기획은 만주를 동아시아의 진원지, 교차지, 시발점이란 시각에서 적극 드러내려는 의지가 반영된 시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 차원의 갈등은 만주보다 한반도에서 더 자주, 그리고 격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이 정착하려면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만주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시각을 더 다듬고 심화시켜 ‘융합’이란 관점에서 만주를 기억하려는 기획·출판은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2008)으로 나타났다.⁷²⁾ 기획을 주도한 만주학회는 동아시아와 만주의 연결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혼종’의 그릇에 담아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혼종성을 강조할 때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의 오족협화처럼 그 이전에도 비슷한 움직임과 사회적 현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명이 미약하면 의도하지 않게 1931년 전후 또는 1945년 전후의 단절성만을 부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융합을 강조하는 2008년판의 ‘만주’는 ‘역제’의 공간이자 ‘분출’의 공간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실체 만주국은 사라졌으나, 소멸을 거부하고 있다. 만주국은 오늘 날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동북아시아 현대사의 블랙박스**에 해당한다. 나아가 산업화, 도시화, 개발국가와 잔인한 폭력의 기록 등 **근대의 기묘한**

71)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72)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얼굴을 제시한다. 기존 학계의 변방이었던 만주는 특혜 받은 일체의 인식과 고정관념의 해체, 기존의 경계 허물기 등을 외치는 새로운 철학적 조류인 **탈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이제 절묘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한 역설의 장소**가 되었다. 만주국을 단순히 괴뢰국이라 낙인찍고 돌아선다면, 그 복잡한 14년의 역사를 파시스트 통치라는 한 덩어리의 주제로 해석하고 마는, 따라서 **모델로서의 잠재성**들을 간과하는 행위일 것이다.⁷³⁾ (강조-인용자)

이는 만주와 만주국 연구가 1945년 이전으로 제한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만주의 복합성이 미치는 영향을 그 이후까지 연계지어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⁷⁴⁾ 만주모던과 한국모던을 연계지어 1999년의 연구를 확장한 한석정의 연구가 대표적인 보기일 것이다.⁷⁵⁾ 탈구조주의의 관점은 없지만, 1945년 이후 시기 조선인(조선족)의 만주역사를 기술하여 만주기역을 확장해준 연구 성과도 있다.⁷⁶⁾

그럼에도 시간성의 제약, 달리 말하면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만주 또는 오늘날 중국의 표현을 빌자면 동북지방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역사상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조선족'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는 몰라도, 만주 전체를 파악하고 1945년 이전과 연계시켜 상상해 보는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분과학문의 특성상 중국사 또는 중국학의 영역이지 한국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제도 및 태도가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사 학계의 입장에서 1945년 이후는 한국근대사의 영역이 아니므로 연구대상, 사고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근대사와 현대사를 잇는 연속과 변용 그리고 단절의 측면을 내장한 만주인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이 국가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기인한다.

시간의 단절성은 융합과 발원지로서 만주라는 측면에서 횡단하는 '동아시아

73) 「서문」, 한석정·노기식 편, 2008, 같은 책, 7 - 8쪽.

74) 만주의 복합성에 주목한 연구는 윤휘탁, 2013, 『滿洲國：植民地の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해안 참조.

75)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76) 염인호, 2011, 『(또하나의) 한국전쟁 :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채영국 외 5인 지음, 2006,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야'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⁷⁷⁾ 과연 1945년 이후 만주가 동아시아 모순(변화)의 발원지인가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아시아'라는 측면에서 만주를 볼 때 발원지라는 관점도 성립할 수 있는데, 공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발원지라는 관점에 한계가 보인다. 왜냐하면 공간성은 역사를 횡단하여 보도록 요구한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트렌내셔널'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연동과 비교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만주지역이 중국 본토, 한반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핵'이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 경우 '지역사'의 맥락에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횡단하는 연구는 연구자 개인에게도 연동과 비교의 관점과 태도를 요구해야 하지만, 학문의 경계를 넘어 협동해야 가능한 작업이다. 가령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전공에 따라 21개조에 대한 이해의 차이, 어쩌면 '浮彫的 接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해석의 다름에서 역설적이게도 이를 절감할 수 있다. 한국사는 21개조요구라는 이름의 역사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 남만주·동부 내몽고에서 일본 국의 우선권」 가운데 조선인의 토지소유권에 관해서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일본사 연구는 제2호 자체에 더 관심을 둔다. 중국사는 제1호인 山東權益에 초점을 둔다. 한국사, 일본사가 만주기억과 연관된 접근을 하고 있다면, 중국사는 이것과 상관없다. 더구나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연구는 서로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비록 일본이 철회했지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제5호의 희망사항에 주목하지 않고, 21개조 요구가 辛丑條約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동아시아사적인 함의에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결국 1915년의 21개조 요구는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에 따라 조금씩 주목하는 시선이 달랐고, 그래서 그것이 동아시아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라는 국가단위의 역사를 넘어 지역사의 맥락에서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77) 어디를 동아시아로 간주해야 하는가. 공간 범주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겠다. 다만, 발표자의 평소 개념으로 말하면 만주학회의 동아시아는 '동북아'에 해당한다.

사 학계로 좁혀 말하면,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라는 시야를 놓치고 있어 제2호가 어느 정도의 ‘핵’인지를 중국 본토 및 식민지 조선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침략자 일본의 움직임만 있는 것이다.

국민국가의 경계와 분과학문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관점은 ‘만주’를 해체하지 못하게 한다. 지명으로서 ‘만주’가 가리키는 공간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였다. 오늘날 중국의 東北三省을 만주로 간주하는 경향은 러일전쟁 즈음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사를 포함해 한국의 역사학계도 마찬가지로 공간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인식은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 1858년 아이훈조약, 1860년 러시아와 청 사이의 베이징조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경우가 많다. 1689년 이전의 여진족이든 만주족이든, 아니면 이들 이외의 거주자들을 고려한 접근은 아닌 것이다. 변동의 ‘핵’으로서 만주, 융합의 공간으로서 만주를 시기에 따라 주목하려면 만주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해방 직후부터 21세기 들어서까지 한국사 학계가 품고 있는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에 대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추적해 보았다.

한국고대사에서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은 여전히 견고하다. 한국근현대사와 관련한 만주기억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교육 차원의 역사교육과 한국인 다수의 정서는 민족과 혈통의 공간으로서 만주를 느끼려 한다. 그래서 ‘중국 동북지방’이란 용어에 낯설어한다. 여전히 感性的 滿洲像이 지배적 만주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근현대사와 관련한 만주기억은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변화해 왔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양하게 기억되어 오던 만주에 대한 기억은 1960년대 중반 한일회담을 둘러싼 갈등을 거치며 정부 주도하에 민족수난사와 민족운동사의 공간으로 단일하게 모아졌다. 남북한

사이에 제제우월경쟁이 격화하면서 사회주의운동 계열이나 북한에 대해 적대적 대결의식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만주기억을 재구성하는데 적극 나섰다. 사회주의운동 계열과 혼종성·다층성은 반일·반공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선택과 배제의 작동 속에서 만주기억이 형성되는 데 있어 외부로부터의 적이자 내부의 불순물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만주기억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냉전체제가 해체된 때를 계기로 만주국을 발견하고 이주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등장하였다. 획일적이고 단일화한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만주기억을 변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은 21세기 들어 만주학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해 왔다. 이때 적용된 핵심 관점이 융합과 혼종이다. 융합지로서 만주의 혼종성에 주목하는 시선은 민족서사 속의 만주기억에 균열을 일으키는 도전이 계속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그렇다고 만주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반공민족주의와 반일민족주의의 과거에 비해 약화하였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해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만주의 친일문제는 핵심 화두이며, 만주국의 혼종성과 다층성은 만주국이란 국민국가의 괴뢰성 때문에 신뢰를 얻기 쉽지 않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민족을 주체로 하는 서사구조를 견고하게 지탱하게 하는 가운데 만주기억을 분열되고 분절적으로 바라보도록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견고하게 쌓아온 집단기억으로서 만주기억을 규정하고 있는 민족서사를 해체하기는 쉽지 않다.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한 분단정권이 역사적 정통성 경쟁을 벌이면서 만주기억을 중요하게 취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그렇다. 한국사 학계를 포함한 한국사회가 민족의 형성과정과 민족 독립국가의 수립이란 두 측면에서 만주를 선택적으로 소환해 왔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그럴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국민국가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역사적 존재로서 만주의 역사 자체의 자기 완결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京郷新聞』, 『東亞日報』

김한중 외 5인, 1993,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문교부, 1975, 『중학교 국사』

_____, 1974,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_____, 1979, 『고등학교 국사』

美軍政廳 文教部, 1946, 『國史敎本』

申奭鎬, 1948, 『中等國史』, 東邦文化社

신석호, 1968, 『인문계 고등학교』, 광명출판사

李丙燾, 1955, 『우리나라의 생활(역사)』, 白映社

李瑄根, 1953, 『政訓教程 13 韓國獨立運動史』, 國防部

「문교부령 제251호(1969.9.4 개정 공포) 중학교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교육부

2. 논문 및 저서

姜萬吉, 1979, 『分斷時代의 歷史認識 : 姜萬吉 史論集』, 창작과 비평사

강만길, 1990, 『朝鮮民族革命黨의 成立과 그 歷史性』,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_____, 1991, 『조선민족 혁명당과 통일전선』, 和平社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高承濟, 1968, 『間島移民史의 社會經濟的 分析』, 『白山學報』 5

권보드래 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
의 상상

김경일 임성모 윤취탁, 2008,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
선인』, 역사비평사

나카미 다사오, 『역사 속의 '만주'상』, 나카미 다사오(中見立夫) 외 지음, 박선영 옮
김, 2013, 『만주란 무엇인가』, 소명출판

김영주, 2019, 『해방 이후 시에 재현된 만주의 기억』, 『우리 文學연구』 6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5 - 독립군전투사(상)』, 독립운동사사업
기금운용위원회

_____, 1973, 『독립운동사 6 - 독립군전투사(하)』, 독립운동사사업기
금운용위원회

朴鍾鴻, 1973.11, 『主體的 民族史觀』, 『國民會議報』 3

慎鏞廈, 1984, 『獨立軍의 靑山里獨立戰爭의 戰鬪들의 구성』, 『史學研究』 38

-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1920~45)』, 아세아문화사
- _____, 2000, 『김일성 가짜설』,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 辛珠柏, 2000, 「青年金日成の行動と世界觀の變化(1929年末から1931年まで)」, 『思想』 912, 岩波書店
- 신주백, 2002, 「북한의 근현대사 연구에서 반침략투쟁사」, 『한국 근현대사 연구』 21
- _____, 2005, 「국민교육헌장의 역사(1968~199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 _____, 2005,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과 국사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편(1968~1994)」, 『역사문제연구』 15
- _____, 2014, 「관점과 태도로서 '內在的 發展'의 形成과 1960년대 동북아시아의 知的 네트워크」, 『韓國史研究』 164
- _____, 2014, 「관점과 태도로서 '內在的 發展'의 분화와 民衆의 民族主義 歷史學의 등장 - 民衆의 再認識과 分斷의 發見을 중심으로」, 『東方學誌』 165
- _____, 2017, 「1960년대 '근대화론'의 學界 유입과 한국사연구 - '근대화'를 주제로 내세운 학술기획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125
- _____, 2018, 「19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 北韓産 역사지식의 유포와 한국사·한국사 - 北傀에서 北韓으로, 半쪽에서 全體로 시선의 전환」, 『구보학보』 20-1
- 신형기, 2005, 「민족이야기의 두 양상 - 안수길의 '북간도'와 이기영의 '두만강' 분석」, 『한국학논집』 32
- 염인호, 2011, 『(또하나의) 한국전쟁 :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 尹炳奭, 1969, 「參議·正義·新民府의 成立過程」, 『白山學報』 7
- _____, 1969, 「1928.9년에 정의·신민·참의부의 통합운동」, 『史學研究』 21
- 李鍾奭, 1997, 「김일성의 소위 '항일유격투쟁'의 虛와 實」, 『韓國史市民講座』 21
- 張世胤, 1996, 「在滿 朝鮮革命黨의 成立과 主要구성원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 전재호, 2002, 「한국 민족주의와 반일(反日)」, 『정치비평』 9
- 채영국 외 5인 지음, 2006,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사회주의운동사 연구반, 1991,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 한수영, 2005, 「만주, 혹은 '체험'과 '기억'의 균열 - 안수길의 만주배경 소설과 그 역사적 단층」, 『현대문학의 연구』 25
-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한석정, 2016, 『민주 모던 :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 한홍구, 2002, 「가짜 김일성과 한국현대사」, 『民族發展研究』 6, 중앙대학교 민족발
전연구원
- 홍석률, 2002, 「1960년대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62
- 洪淳鈺, 1968.3, 「上海臨時政府의 正統化過程 - 漢城政府와의 一體化作業을 中心으로」,
『新東亞』

투고일 : 2019년 9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0월 28일

■ Abstract ■

Korean Historian's Memory of Manchuria and Manchurian State

Sin, Juback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is paper trace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Manchuria as a collective memory of Korean academia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o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This emotional space is remembered constituted within Korea's national narrative of Manchuria's history. In 1945, liberation and division subsumed Manchurian experiences within the sphere of an individual's nostalgia. In the fierce system's level competition with Korea-Japan talks and between the two Koreas, Manchuria became a space memorialized within memories of political rife and resistance between nations. The state restored and reconstructed Manchurian memory as collective memory, operating through meticulous selection and exclusion and based on principles related to anti-communism and anti-Japanese nationalism aimed at concrescence. However, in the late 1980s,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system at the global level resulted in a lack of uniformity and cracks in a unified Manchurian memory. The new gaze is one of hybridity, envisioning Manchuria of the past as a space of harmony. Anti-communism and anti-Japanese nationalism, however, remain active elements of recall in the national memory of Manchuria—an essential space in the anamnesis of national recollection of the Manchuria as a puppet state and the memory of Korea's national division.

Key words: Collective Memory, Manchuria, History Textbooks, East Asia, Concrescence